

인구 감소 시대, 지자체의 고졸자 취업지원 실태와 과제

- 최근 3년 간 직업계고 졸업 국내취업자의 2/3 가량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역(시·도 기준)에 취업함. 지자체 담당자들의 ‘직업계고 졸업자의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취업선호가 낮다’는 응답은 41.2%로 교육청 관계자 보다 31.4%p, 기업체 인사담당자 보다 26.9%p, 학교 취업부장교사 보다 10.5%p 높음.
-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지자체의 고졸자 취업지원 요구가 낮고, 직업계고 취업지원 항목들의 필요도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함.
- 지자체 담당자들의 중앙정부 고졸취업 정책 인지율은 14.9%로 낮은 반면, 향후 지자체의 고졸자 취업 지원이 지금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.0%로 높음.

주

이 글은 '윤형한 외(2019), 「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-지자체 역할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」, 일자리기획단-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일부를 발췌, 재정리하여 작성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전략으로 고졸자 취업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우리나라 총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되고 있음. 인구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유출 최소화, 지역 내 기업으로의 취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유도가 지역회생의 중요한 전략임.
- 지자체는 지역 내 기업의 인력난 특히 고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고졸인력 확보, 고졸자의 지역 내 취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음. 특히 지방분권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고졸취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.
- 이 글에서는 “고졸자 취업지원 실태 및 요구 조사”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감소 시대에 지자체의 고졸자 취업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분석 자료: 2019년 「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-지자체 역할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」 연구의 “고졸자 취업지원 실태 및 요구 조사” 원자료

- 조사 대상: 지자체 일자리 · 취업업무 담당자, 직업계고 취업부장교사, 기업체 인사담당자, 교육청 담당자 등

〈표 1〉 ‘고졸자 취업지원 실태 및 요구 조사’ 현황(단위: 개,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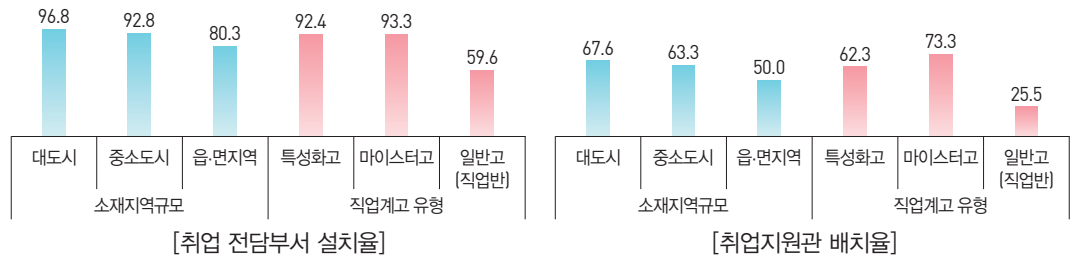
구분	모집단(목표표본 기관)	목표표본 응답자	응답 기관	응답자(분석)
지자체	243[243]	243	233	222
학교	582[582]	582	555	555
기업체	13,973[1,397]	1,397	1,670	1,296
교육청	17[17]	51	17	51

02 고졸자 취업지원 및 요구에 대한 지자체 인식

대체로 고졸자에 대한 취업지원 여건이 미흡하고, 지자체의 고졸자 지역 내 취업에 대한 인식, 학교가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에 대한 인식 등의 개선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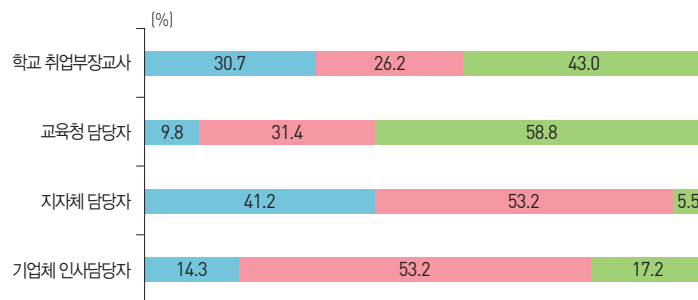


- 직업계고 중 읍·면지역 소재학교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소재 학교보다 취업지원 여건이 낮고, 일반고(종합고, 전문학과가 있는 일반고, 이하 동일)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비해 취업지원 여건이 낮음.
 - 학교 소재지역별 취업 전담부서 설치율은 읍·면지역 소재학교가 80.3%로 대도시 보다 16.5%p, 중소도시 보다 12.5%p 각각 낮음($p<.05$). 취업지원관 배치율의 경우 읍·면지역 소재학교는 50.0%로 대도시에 비해 17.6%p, 중소도시에 비해 13.3%p 각각 낮음($p<.05$).
 - 직업계고 유형별 취업 전담부서 설치율은 일반고가 59.6%로 특성화고 보다 32.8%p, 마이스터고 보다 33.7%p 각각 낮음($p<.05$). 취업지원관 배치율의 경우 일반고가 25.5%로 특성화고에 비해 36.8%p, 마이스터고에 비해 47.8%p 각각 낮음($p<.05$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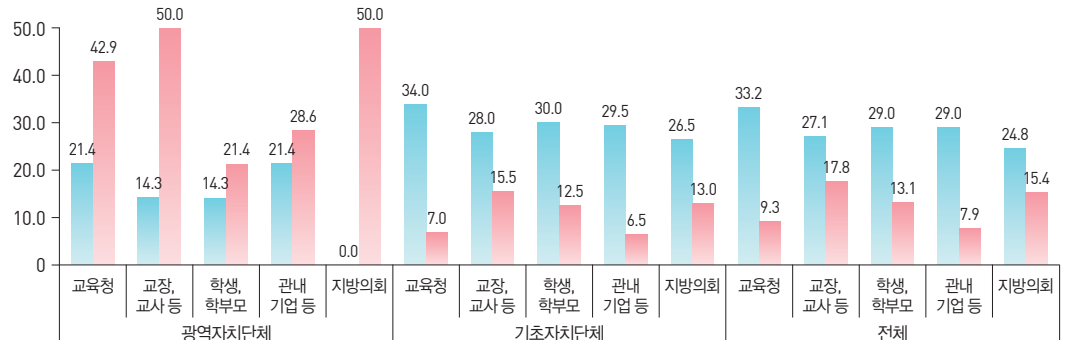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여건(단위: %)

- 직업계고 졸업 국내취업자의 2/3 가량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역(시·도 기준)에 취업함.
 - 최근 3년 간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2016학년도 72.3%, 2017학년도 68.7%, 2018학년도 63.8%로 감소 추세임. 하지만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역에 대한 취업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.
 - 지자체 담당자들의 ‘직업계고 졸업자의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취업선호’가 낮다’는 응답은 41.2%로 교육청 관계자 보다 31.4%p, 기업체 인사담당자 보다 26.9%p, 학교 취업부장교사 보다 10.5%p 높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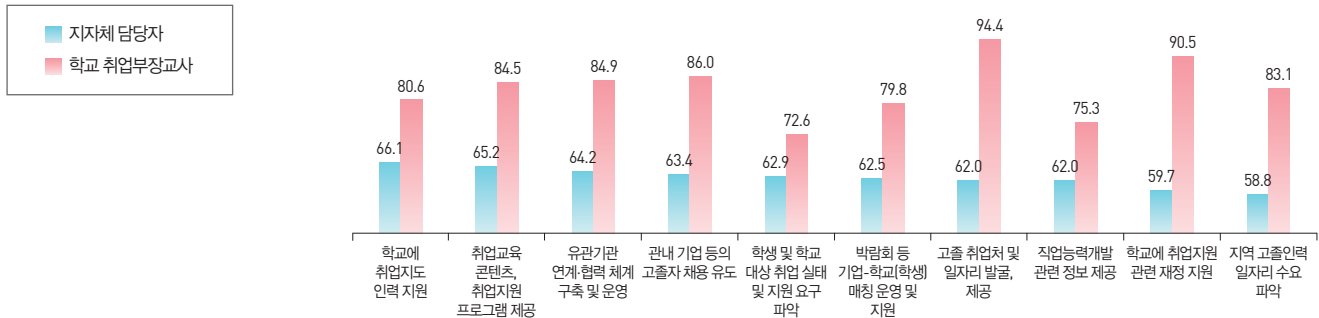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‘직업계고 고졸자의 지역 내 기업 취업선호’에 대한 인식(단위: %)

- 지자체 담당자들은 ‘지자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졸자 취업지원 요구’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([그림 3]),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이 학교의 요구와 차이를 보임([그림 4]).
 -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반적으로 ‘지자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졸자 취업지원 요구’가 ‘높다’(높음, 매우 높음)는 응답 보다 ‘낮다’(매우 낮음, 낮음)는 응답이 높았음($p<.05$). 이러한 응답은 지자체 유형별로 차이를 보임.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들에 비해 ‘낮다’는 응답이 ‘높다’는 응답보다 높음($p<.05$).



[그림 3] ‘지역사회 내 지자체의 직업계고 취업지원 요구’에 대한 인식(단위: %)

-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자체가 직업계고의 취업지원에 필요한 항목으로 '학교에 취업지도 인력 지원' 66.1%, '취업교육 콘텐츠,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' 65.2%, '유관기관 연계·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' 64.2% 등의 순으로 응답함. 반면, 직업계고 취업부장교사들은 '고졸 취업처 및 일자리 발굴·제공' 94.4%, '학교에 취업지원 관련 재정 지원' 90.5%, '관내 기업 등의 고졸자 채용 유도' 86.0%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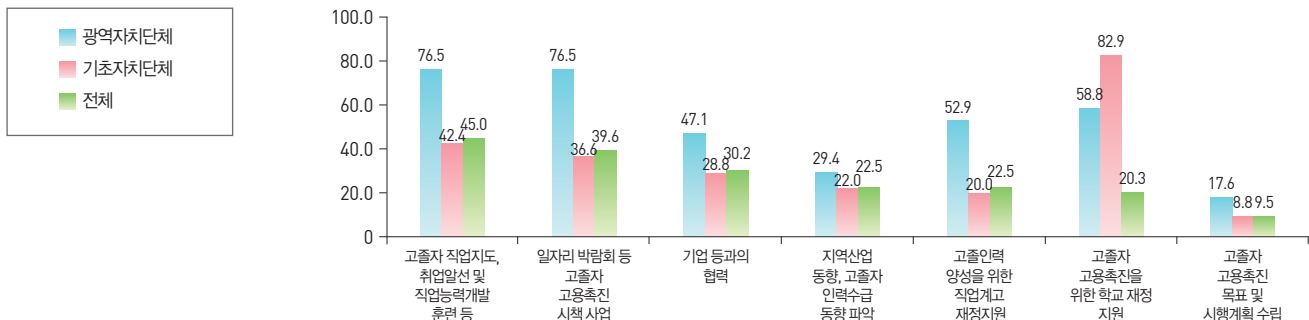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'지자체의 고졸자 취업지원 필요도'에 대한 인식(단위: %)

- 직업계고 취업부장교사들은 '지자체의 직업계고 학생(졸업예정자 포함)의 취업에 대한 관심·지원 정도'가 '높다'(높음, 매우 높음) 35.1%, 직업계고 취업지원 시책(사업) 수립·운영이 '높다'(높음, 매우 높음) 33.5%로 각각 응답하여 지자체에 대한 지원 기대와 지자체의 실제 지원 간 차이를 보임.

03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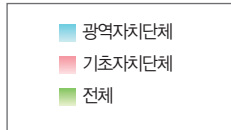
지자체의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체계,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.

- 지자체에서 고졸자 취업지원은 정책적으로 후순위이고, 고졸자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갖춘 지자체의 비율도 적음.
 - 고졸취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 지자체는 9.0%(20군데)이고, 지자체 내 일자리·취업지원 우선순위는 청년층 > 중장년층 > 경력단절여성 > 노년층 > 고졸자 순임.
 - 지자체가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항목은 '고졸자 대상 직업지도,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' (45.0%), '일자리 박람회 등 고졸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'(39.6%) 순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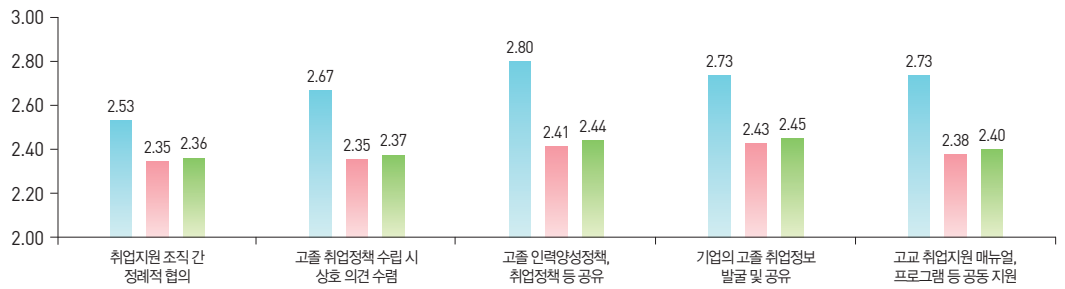


[그림 5] 지자체의 고졸자 취업지원 내용(단위: %)

- 지자체에서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기관 간 취업지원 네트워크(협의체)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고,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함.
 - 지자체가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취업지원 네트워크(협의체)를 구성한 비율은 응답 지자체 222개소 중 8.6%(광역 23.5%, 기초 7.3%)이고, 이중 2018년에 운영 횟수는 1~2회가 52.6%, 운영하지 않은 비율은 36.8%였음.
 - 지자체 담당자들은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정도를 5점 만점에서 3점 미만으로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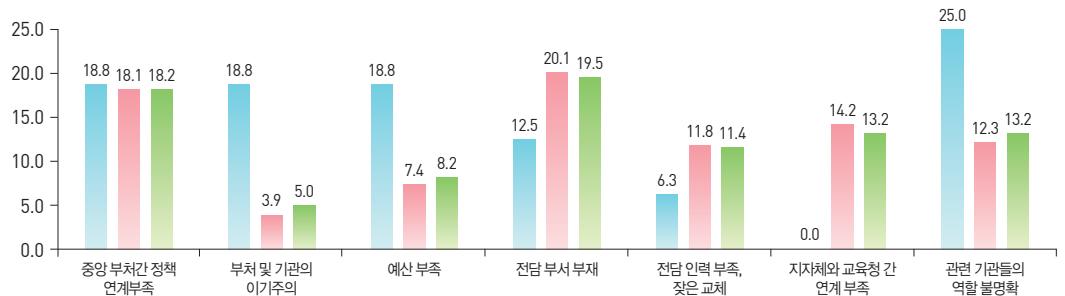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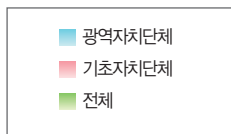


주
5점 만점의 평균임.
※1점(전혀 이루어지지 않음), 2점(이루어지지 않음), 3점(보통), 4점(이루어지고 있음), 5점(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)



[그림 6] '중앙정부-지자체 간 협력정도'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(단위: 점)

–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렇게 고졸자 취업지원에 있어 중앙정부-지자체 간 협력이 낮은 이유를 '전담 부서 부재'(19.5%), '중앙 부처간 정책 연계 부족'(18.2%), '지자체와 교육청 간 연계 부족'(13.2%), '관련 기관들의 역할 불명확'(13.2%), '전담 인력 부족 및 잦은 교체'(11.4%), '예산 부족'(8.2%) 등으로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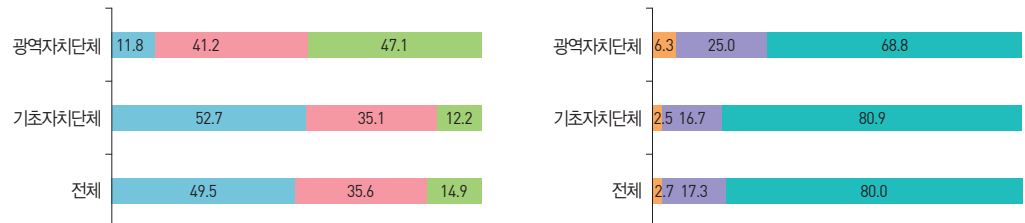


[그림 7] '직업계고 취업 관련 중앙정부-지자체 간 협력'이 낮은 이유(단위: %)

– 지자체 담당자들은 2019년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고졸취업 활성화 방안」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.9%(광역 47.1%, 기초 12.2%)로 낮았지만, 지자체 담당자의 80.0%(광역 68.8%, 기초 80.9%)는 향후에 지자체의 고졸자 취업지원이 지금 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함.



주
고졸정책 인지도: 모름('전혀 모른다', '모른다'), 보통('보통이다'), 알고 있음('다소 알고 있다', '매우 잘 알고 있다')



[그림 8] 지자체의 고졸정책 인지도 및 고졸자 취업지원 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(단위: %)

04 시사점

- 고졸취업 후 취업희망자들은 학교 소재지역, 학교 유형 등 학교 환경과 무관하게 지역 내 취업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. 이를 위해서 이들이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'지역 친화 인력'이라는 인식 형성이 지자체에 요구됨.
- 고졸취업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이 고졸취업 지원에 대한 인식 형성, 고졸취업 지원 역량 강화, 각종 취업지원 인프라의 협력 확대 등 고졸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고졸취업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등한 위치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각자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음.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, 사·도교육청, 직업계고,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고졸자 취업정책 및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공유하는 (비)정기 협의체를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윤 형 한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)